

2020 재한중국동포 리더 및 지성인들과 함께하는 다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발제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김정통
다가치포럼 대표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중국인 차별·혐오 현상과 대응방안

일 시 : 2020. 8. 7(금) 14:00~17:00

장 소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문 의 : 02-2229-4908, hotline@swsgc.co.kr

온라인 실시간 방송 : 구로채운 유튜브 url.kr/Owq4l6



주최 : 다가치포럼

Southwest
Seoul Global Center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西南首尔国际中心

구로문화재단 GURI CULTURAL FOUNDATION

주관 :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중국동포타운신문, 동북아신문, 한중포커스신문

후원 : (사)CK여성위원회, (사)조각보, (사)더불어 동포연합회, 귀한동포총연합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민들레예술단, 민들레사랑회, (사)이주민센터 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목 차

01 행사순서 05

02 인 사 말 07

김정룡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장	08
문현택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	10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12
윤건형, 국회의원	13
윤영환,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이사	14

03 주제발표 17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9
김정룡,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장	37

04 주제토론 47

조영관, 변호사	48
김동훈, 서울서남권글로벌센터장	52
전춘화, 홍익대학교 교수	55
박동찬, 이주민활동가	57

01

2020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행사순서

2020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3:30 - 14:0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개회 및 사회자 인사
14:05 - 14:10	포럼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
14:10 - 14:20	축사 및 내빈소개
14:20 - 14:25	감사패 증정식
14:25 - 15:00	주제발표
15:00 - 15:40	주제토론
15:40 - 15:50	휴식
15:50 - 17:00	토론 및 질의응답
17:00 -	폐회

- 사 회 나기석(구로문화재단 지역문화사업팀장)
- 좌 장 광재석(이주동포정책연구소 이사장)
- 패 널 조영관(변호사) 김동훈(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장)
전춘화(홍익대학교 교수) 박동찬(이주민활동가)

02

2020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인사말

개회사

김정룡
다가치포럼
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내에서 들끓기 시작한 것은 구정이 지난 직후였다. 당시는 코로나19라고 부르지 않고 ‘우한폐렴’이라고 명명했다. 이 감염병 명칭은 중국발 전염병이라는 어감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과거 중국과 중국인(중국 동포포함)을 못 마땅하게 여겨왔던 일부 한국 언론이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한국 내 중국인 최대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을 찾아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찬 내용의 기사를 생산해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지역 중국인을 가장 혐오스럽게 다룬 것은 헤럴드경제였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1월 29일 헤럴드경제 르포기사 제목이다. 같은 시기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한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 아주 드물었는데 이런 보편적인 현상도 유독 대림동에 오면 특수한 사례처럼 보이는 것은 제목 자체부터가 차별을 넘어 혐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코로나19사태에 있어서 한국 언론이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에 앞장서자 잇따라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혐오가 터져나기 시작했다. 음식점, 가정부, 간병인 일을 하고 있던 중국동포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인 업주들이 중국인을 ‘온역(코로나19)’ 전파자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사실 절대다수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코로나19사태 직전이거나 한창 유행할 때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병균을 전파할 확률이 제로다. 그런데도 일단 중국이 문제가 되면 따라서 재한중국인을 연관시키고 차별·혐오한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현상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데 선두주자는 보수진영이다. 코로나19사태가 한창 최대 사회 이슈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2월 말경 이른바 ‘조선족게이트’ ‘차이나게이트’라는 실체가 없는 유령 즉 가짜뉴스를 생산해냈다. 3월 1일에는 이 가짜뉴스가 한국 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라올 정도로 들끓었다. 보수당 몇몇 국회의원이 가세했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론까지 모으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짜는 가짜이지 진짜가 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들끓다가 금세 식어버렸다. 그런데 4월 10일 선거 닷새 앞두고 TV조선 탐사기획 프로에서 뜬금없이 또 ‘차이나게이트’를 다뤘다. 물론 총선에 아무 영향 주지 못했고 유아무야하게 잊혀졌다.

‘석자 얼음이 하루아침에 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국 내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현상도 오늘어제 일이 아니다. 10년 전 영화 ‘황해’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얼굴 방송인 KBS가 ‘황해’라는 개그프로를 제작해 1년 내내 방송해 조선족 하면 보이 스피싱 범죄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 후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을 혐오지역으로 각인시켜놓았고 조선족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놓았다. 드라마도 가세해 조선족을 장기매매, 마약, 보이 스피싱, 청부살인을 일삼는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갔다.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코로나19사태에 이르러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가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재한중국인사회는 이와 같은 차별·혐오 현상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마땅히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재한중국인사회는 내국인에 비해 공공의식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수준 제고에 힘 써야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과 자질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의롭지 못하고 차별적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식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한 중국인사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기여한 것들이 있으면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포럼은 코로나19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중국인(동포포함) 이주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혐오 현상을 극복하고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2020년 8월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장 김 정 룡

인사말
문현택
다가치포럼
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중포커스신문 문현택 대표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동포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더욱 심해졌고, 일부 언론들이 동포 밀집지역 대림동을 집중 취재하며 이곳을 마치 코로나 진원지 인양 앞다투어 왜곡 보도를 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국제적 기구인 WHO가 명명한 ‘코로나-19’를 몇몇 보수 언론사와 더불어 보수정당 대표까지 나서서 끝내 ‘우한폐렴’으로 지칭하며 중국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발 사태가 터질 때마다 일부 언론들은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국내 최대 중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을 찾아 혐오를 유발하는 기사를 생산해 왔습니다.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제목은 물론이고,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를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이처럼 보도하자 일부 국민들은 이를 받아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무참히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SNS 상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라!”, “중국인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한 모욕적인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중국인을 ‘코로나-19’ 전파자로 취급하며 식당 출입구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놓는가 하면, 일하던 중국인 직원을 해고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차별·혐오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보수 진영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월 말경, 전혀 실체도 없는 이른바 ‘조선족게이트’, ‘차이나게이트’라는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혐오의 재료로 유통되었습니다. 또 총선에서 낙선한 전 국회의원 민모 씨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이 ‘선거에 조선족과 중국이 개입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황해’나 ‘청년경찰’, ‘범죄도시’는 한국인들에게 대림동과 가리봉동을 혐오지역으로 각인시켜 놓았고, 중국 동포사회를 장기매매, 마약, 보이스피싱, 청부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일삼는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이 같은 차별과 혐오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다가치포럼’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론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윤건영 의원님과 구로문화재단 허정숙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주민센터 친구 윤영환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시는 객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발제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과 김정룡 다가치포럼 대표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서주시는 김동훈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장님과 전춘화 홍익대학교 교수님, 조영관 변호사님, 박동찬 이주민 활동가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가 끊임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가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 문 현 택

환영사 8월 7일 절기상 입추입니다. 가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말복도
 지나지 않았고요. 남은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2020년 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직면합니다.
 예상치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고민하고있습니다. 즉,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2년 후면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중국동포들과 상시적 상생을 고민한지도 30년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조금 더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조망되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올 2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구로에서 진행했던 간담회에서부터 점검된 내용이지만 중
 국동포에 대한 혐오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모범적으로 일본이 요청하는 방역생활에 응하고 있으나 혐오현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너머에 짓게 베인 오해와 편견에서 오는 차별과
 혐오현상을 세심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는 1980년 영등포구로부터 분구합니다. 다시 1994년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분
 구하게 됩니다. 도시의 팽창과 성장에 있어 이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
 부터 환대로 응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상생과 발전을 위한 포용의 정신이 중요한 사
 회적 가치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로 우리 다(多)가치포럼의 위원장이신 김정룡 선생님도 계시지만 열정적 활
 동을 펼치고 계신 홍성수 교수님의 발제에도 주목해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과 상생을
 고민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오늘의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多)가치포럼의 2차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
 합니다.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응원의 박수와
 함께 환영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허 정 숙

축사

안녕하세요.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2020 다가치포럼〉 제2회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 미문의 팬데믹 상황은 단순히 경제나 산업 등 우리 삶의 일부뿐 아니라 생활 양식 전체를 바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고, 생각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은 쉽게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곤 하는데, 코로나19 초기 상황이 그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일부는 가까이 있는 재한중국동포 사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스로 더 경계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던 동포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행히 지금은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세를 잡고 안정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방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방역수칙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사회와 재한중국동포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기고 있는 만큼, ‘다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국회의원 윤 건 영

축사

윤영환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

이주민센터 친구는 2011년경부터 대림동에서 평화, 인권, 공존을 기치로 이주민 법률 인권 지원활동, 정착지원활동,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경찰로 인한 동포들의 집단적 시위와 저항에 동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이 대림동에 있습니다. 대림동에서 동포사회의 변화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대림동도 많이 변화했고 한국사회에 이주하는 동포들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인구가 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동포 비하와 혐오의 표현도 증가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번과 같은 포럼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포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현재와 같은 내국인의 일부 혐오 반응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동포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의 혐오가 작동합니다. 한국사회의 모순과 병리적인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소수라고 하여 부당하게 대우받고 억울하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 발전할 수 없고 시대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동포들에 대한 혐오 감정과 일부의 왜곡된 반응은 잘못된 정보와 가치관, 믿음에 기반한 것이기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가 바로 잡히고,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한국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동포를 비롯한 이주자 집단에 투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고히 인정될 때 혐오 현상은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동포들과 양심적인 내국인들의 고된 노력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출신지역과 이주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확고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올해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혐오표현을 통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주류적 견해입니다. 소수의 종교계, 경제계 등에서 사적 이익과 잘못된 가치관과 정보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포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배제할 수 없는, 무시못할, 무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동포들께서 이주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차별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앞장섬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국사회의 공정과 평등, 발전에 기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치포럼이 수년간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전달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동포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영향력 확대,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받기 등을 위한

사회, 정치, 문화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크고 소중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속된 발전과 기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이주민센터친구 대표 윤 영 환

03

2020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주제발표

코로나 시대의 중국인 혐오와 차별

- 현상과 대응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다가치포럼

코로나 시대의 중국인 혐오와 차별 - 현상과 대응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일시: 2020년 8월 7일 오후 2시

장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혐오와 차별의 의미

- **혐오(hate)**: 특정 소수자 개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또는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 (cf: 사전적 의미: 싫어하고 미워함. to dislike someone or something very much)
- **차별(discrimination)**: 편견과 혐오에 기반하여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cf. 증오범죄(hate crime): 편견에 기반한 범죄(폭력, 방화, 살인 등)

혐오의 의미

- 혐오: 쉽게 확산되어 여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때로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사회에서 학습되거나 이데올로기화된 태도나 인식이라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김왕배, 2019)
- 혐오주의: 혐오의 감정을 기저 감정으로 해서 표면화되는 여러 종류의 행위, 태도, 견해 (김용환 외, 2018)

혐오표현의 개념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혐오와 차별의 해악

-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침해, 인격적 모멸감 (Hellman, 2008)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 훼손 (형식적/실질적 기회 상실) (Waldron, 2012)
- 혐오와 차별의 확산 (cf. 차별이 차별을 낳는다)
- 소수자 집단의 집단적 피해 (cf. 특정하는 경우, 특정하지 않는 경우)
- 폭력(증오범죄)의 유발

세계의 혐오

- 유대인 혐오, 홀로코스트
- 유럽, 반이민정서 확대, 반EU, 극우파 약진
- 브렉시트와 반이민정서 확대
- 트럼프와 혐오의 시대

한국사회와 혐오

- 해방 이후 좌익 척결, 반공주의, 반북이데올로기 (cf. 통진당 해산)
- 지역주의와 지역차별
- 장애인, 부랑인, 빈민, 감염인 등에 대한 격리와 배제 (cf. 국민 vs. 비국민)
- 2010년 이후 이주자/이주노동자 혐오: 반다문화주의, 이주자반대를 내세운 인터넷 커뮤니티 등장
- 2012년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소수자 혐오의 놀이화 (cf. 여성, 민주화운동세력,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호남, 세월호 등)
- 2010년대 이후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동성애운동
- 2010년대 이후 중국동포/조선족 혐오의 확산 (cf. 영화 청년경찰/범죄도시)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한국사회에서의 혐오의 확산

- 사회문화적 배경: 집단주의 문화, 동화주의 문화, 민족중심주의 전통, 다문화/다민족사회 경험의 부재, 반공주의와 반북이데올로기, 반차별/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의 조건: 사회구조에 이질적 요소. 사회이동성. 급격한 사회변화. 경쟁과 갈등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 등. 착취. 의사소통과 지식의 전달이 막혀 있음. 소수집단 규모 증대. 공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억제되어 있지 않음. 민족중심주의 전통. 동화주의나 문화다양성의 부재 (Allport, 1954) → 한국 현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한국 31.8%, 미국 13.7%, 호주 10.6%, 스웨덴 3.5% (여성가족부 조사);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한국 79.8%, 네덜란드 6.9%, 미국 20.4%, 싱가포르 31.6%, 대만 40.8%, 중국 52.7%, 말레이시아 58.7%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사회에서의 혐오의 확산

- 경제적 배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시대의 도래, 청년실업의 증가, 취약해진 개인의 지위 → 허탈감/시기/불만/분노/우울/공격성향/부정적 자기평가/낮은 자존감
- 미디어 환경: 한국 특유의 인터넷 문화, 인터넷을 통한 주목 경쟁, 가짜뉴스/음모론의 확대
- 정치적 맥락: 혐오에 맞설 수 있는 건강한 민주정치세력의 약세,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 (cf. 동성애, 이주자, 난민 문제와 한국 정치)

혐오의 확산

- 혐오 확산의 경로
- 사회경제적 위기 → 자기이익과 안전에 대한 집착 → 불안과 공포심 → 가짜뉴스/음모론, 인터넷/언론의 조장 → 책임전가, 희생양 만들기 → 집단주의 강화, 특권화 → 이질적 집단에 대한 거부감/적대성, 타자화, 동료시민에 대한 혐오 정당화 →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

최근의 혐오 확산 경향

- 인터넷 놀이에서 정치운동으로

- 온라인 → 오프라인
- 놀이/재미 → 행동

(cf. 퀴어축제 저지, 반페미니즘운동, 2017년 난민 반대 운동)

- 안전 담론과 혐오의 확산

“신분이 불확실하고 범죄가능성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모두 영구 추방해야한다.”

“프랑스 난민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이슬람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

“(난민) 아랍인들이 강간을 놀이처럼 즐긴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위협한다.”

최근의 혐오 확산 경향

-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계속 급증한다면 10년 안에 전 국민은 심각한 세금폭탄을 맞게될 것이다.”

“5.18 유공자가 국가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공기관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여성할당제, 각종 여성정책, 남성의 군의무복무 등으로 청년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예) 공정성 담론, 무임승차론

예) 이주자 혐오, 난민 혐오, 여성 혐오, (정신)장애인 혐오, 동성애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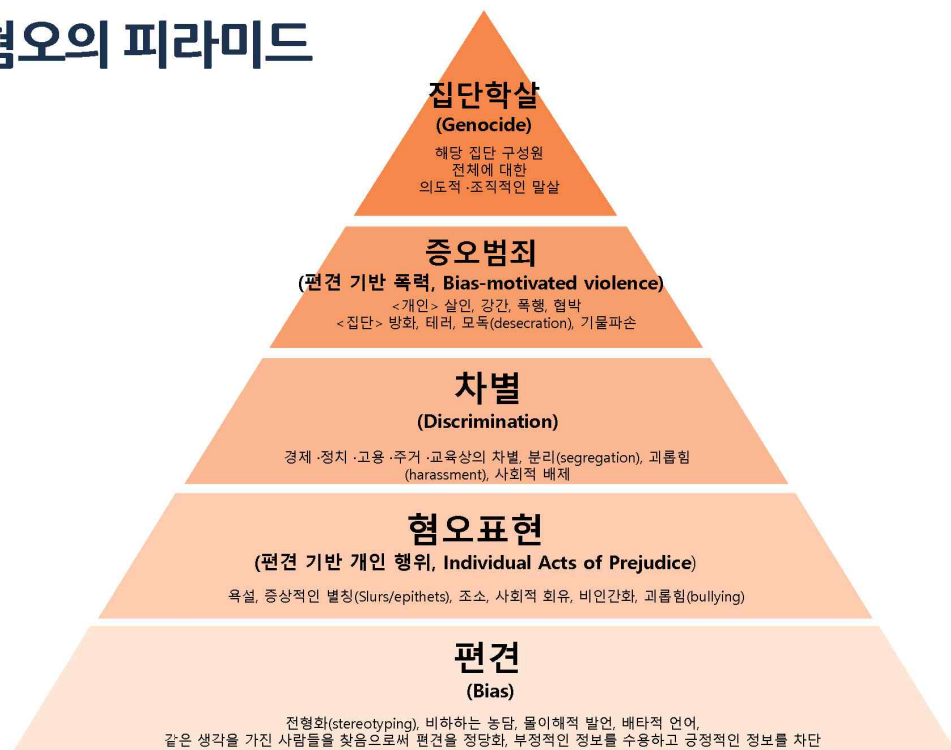
예) 문과충, 맘충,정시충, 진지충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 침묵강요: 권력자/다수자의 침묵시키는 말 (예: 김치녀, 김여사, 개 녘녀)에 대해 소수자는 침묵이나 회피를 선택 (예: 웃기, 무시하기, 피하기)
- 부정적 이미지 축적: 허위를 사실로 고착화 (예: 여성은 수학을 못 한다, OO인종은 머리가 나쁘다.)
- 구분을 통한 열등화, 비정상화, 비주류화 (예: 여검사, 다문화)
- 불쾌감 유발: 욕설의 역겨움과 상처 (예: 히틀러 - 유대인 '해충', 스탈린 - 독립자영농 쿨라크 '계급의 적', 일본 - 재일코리안 '바퀴벌레', '기생충', 르완다 후투족 - 투치족 '바퀴벌레')
- 순종과 적응의 강요 (예: 살빠라, 조신해야지)
- 비가시화 (예: 안보이는 데 있어라, 퀴어축제 안하면 안되냐)

(* 김지혜, 2017; 유민석, 2016 등)

혐오의 피라미드



출처: <http://www.adl.org/assets/pdf/education-outreach/Pyramid-of-Hate.pdf>

혐오의 확산 계기: 위기

- 편견과 혐오는 일상적인 시기에도 존재함 (cf. 인종주의)
- 편견과 혐오가 폭발하는 계기
 - 1) 사회경제적 위기: 독일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유대인 혐오(홀로코스트), 유럽 복지국가 위기와 이주자 혐오, 미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이주자 혐오, 한국의 경제위기와 혐오 확산
 - 2) 재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일본대지진 이후 험한 시위 증가 (노윤선, 2018)
 - 3) 감염병: 스페인 독감과 외국인혐오, 표플리즘 (나치 집권) vs. 코로나19와 아시안/중국인 혐오, 민족주의 (Washington Post, 2020.3.23,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2020)

-> 코로나와 혐오도 이전의 편견과 혐오가 재난 상황에서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코로나와 차별

- 차별: 차별받거나 소외된,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에 피해가 더 집중될 수 있음.

예) 노인, 기저질환자, 장애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소수 인종, 소수 민족, 소수 종교인,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국내실향민, 선주민, 시설에 수용된 사람, 수감자, 구금자, 성소수자 등

참고) 관련 UN 문서

장애인 권리와 COVID-19(4.29)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4.7.)
COVID-19와 여성 인권(4.15.)
COVID-19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 인권 지침(4.8.)
COVID-19와 노인인권 유엔 사무총장정책 보고서(5.1)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COVID-19 관련 보도자료(3.27.)
COVID-19 상황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 지침(3.27.)
COVID-19 성소수자 인권 지침(5.8.)

코로나와 차별

“전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은 낙인과 차별에 특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중보건 및 코로나19에 대한 회복 대응의 맥락을 포함하여 법, 정책 및 관행상으로도 권리에 대한 접근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OHCHR, 코로나 이주민 인권지침, 2020)

“이주민, 국내실향민과 난민은 캠프나 정착지, 또는 과밀화되고 취약한 위생, 과장되거나 보건 서비스가 접근 불가능한 교외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에 직면한다. 외국인 보호센터나 이민자와 난민의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구금된 사람은 특히 위험에 처한다.” (OHCHR, COVID-19 인권보호지침, 2020)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필수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다” (OHCHR, 코로나 이주민 인권지침, 2020)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은,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과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진실이다.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 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2020)

코로나와 혐오

- 혐오: 코로나19의 피해가 낙인, 혐오,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코비드-19 대유행은 특정 국적 및 인종 그룹에 대한 낙인, 차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코비드-19 질병명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OHCHR, COVID-19 인권보호지침, 2020)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주민 및 이주와 관련된 소수민족은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희생양을 만드는 태도 및 행동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OHCHR, 코로나 이주민 인권지침, 2020)

“정부 당국은 낙인 찍기 및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 선동, 증오 및 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공개 담론 및 대응이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HCHR, 코로나 이주민 인권지침, 2020)

코로나와 혐오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낙인과 차별이 건강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여성, 아동, 인종, 민족적 소수자, 장애인, HIV감염인, 난민 등 소수자 집단들의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UN 건강권 특별보고관, 2003)

공포와 혐오의 전가로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을 더 숨게 만들어 효과적인 방역을 어렵게 만든다 (국제적십자사,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가이드, 2020)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다양한 집단, 개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2020)

한국사례) 취약계층, 소수자에 대한 혐오

- 사례: 중국인, 중국동포(조선족), 신천지, 성소수자, 대구, 이주자, 확진자, 집단감염 관련자 등
- 실제로 소수자나 취약계층/집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비난 강도가 훨씬 높고 더 오래 지속됨
 - 기존의 편견/혐오가 가중됨
 - 책임전가, 희생양 만들기

e.g.) 쿠팡맨 국민청원: “쿠팡맨은 죄인이 되어버린듯한 기분이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것도 주저한다. 아파트내에 공고를 붙여 쿠팡맨은 못들어오게 막아버렸다.

한국사례) 중국인/중국동포/조선족

-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인, 중국동포, 조선족에 대한 낙인과 혐오, 차별이 시작됨
-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제 지침에 반하는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 고집
- 중국동포 밀집지역(대림동)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76만 명 넘는 동의 (1월 23일)
-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 (인터넷 게시판, 댓글)
-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 등장

* 혐오에 반대하는 언론보도 (한겨레신문, 2020.1.29)

예림도 기자

상인들 “손님들 불안할까 마스크 안써요…복불복이죠 뭐”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범한 일주일에 평범한 하루. 손으로 겨우 움직이는 작은 가게에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보낸 손님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구 대림2동)에서 1월 29일 오전 11시경,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29일 오전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 가게의 주인이 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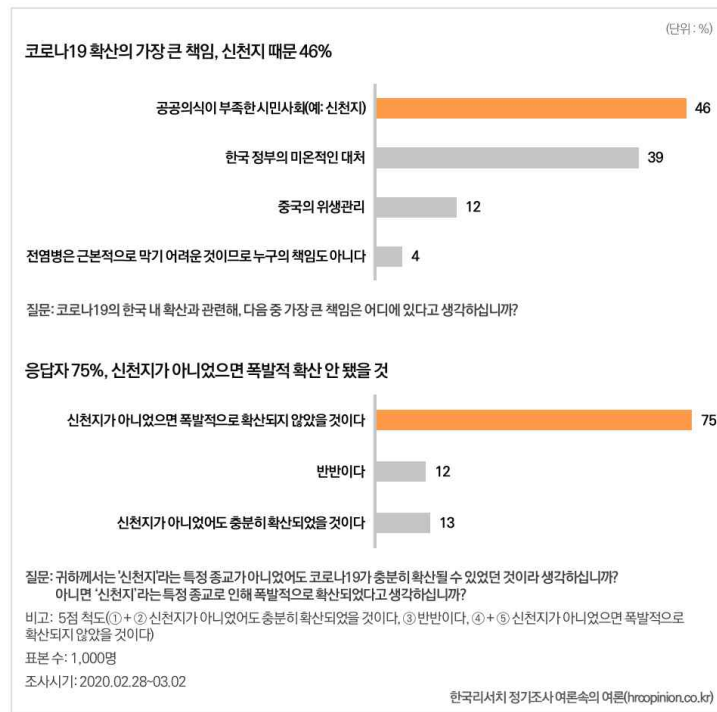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상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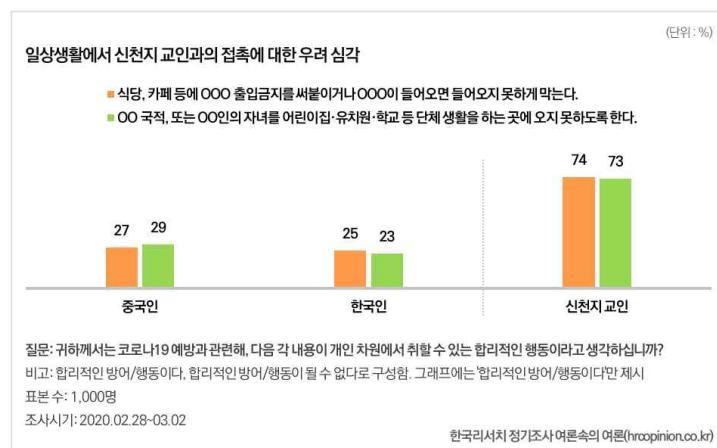
->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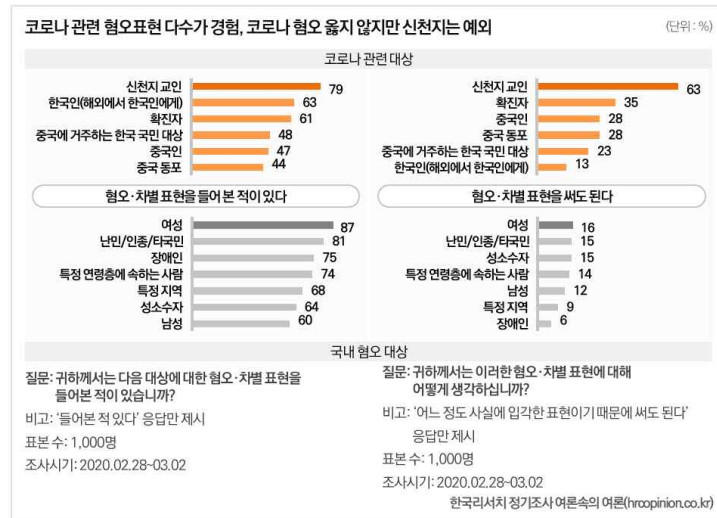
2020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주제발표
코로나 시대의 중국인 혐오와 차별-현상과 대응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한국리서치, 2020.3.25



* 한국리서치, 2020.3.25



* 한국리서치, 2020.3.25

대응 방안1: 정확한 정보 제공

- 방역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있음.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낙인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함.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와 인식제고 캠페인 전파는 오보와 공포를 먹고 사는 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차별, 외국인 혐오 관련 사건들을 감시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응하는 것은 신속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 (OHCHR, COVID-19 인권보호지침, 2020)

대응 방안2: 차별없는 방역 대책

-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주민을 배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 (4월 2일)
- 이주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 (4월 9일)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 사각지대로 ‘미등록 외국인’을 꼽으며, 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음.
- 국가인권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권고 (6월 11일)

대응 방안3: 정치인, 언론, 시민사회

- 정치인이나 사회유력인사들이 혐오에 맞서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야 함.
- 시민사회에서도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고, 과도한 불안, 공포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대응 방안3: 정치인, 언론, 시민사회

커뮤니케이터와 공공 보건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낙인에 맞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DC, 2020.3.20)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유력 인사들은 이 위기가 초래한 낙인 씌우기와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발언을 해야 하며 그러한 차별의 불씨가 점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는 공포를 유발하는 수사적인 발언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코비드-19 대응이 특정 사람들을 폭력과 차별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OHCHR, COVID-19 인권보호지침, 2020)

혐오에 반대하는 보도 사례: 미디어오늘, 2020.5.13, 연합뉴스, 2020.5.14, 아시아경제, 2020.3.10, 경향, 2020.5.21, 한국일보, 2020.4.13, 서울경제, 2020.2.13

혐오 반대 메시지 사례

중국 유학생도 우리 학생이다. 혐오의 시선을 거두어 달라. (유은혜 교육부총리)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에 반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2020. 2. 5)

박원순 서울시장, “배제와 혐오는 감염병과 싸우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2020b):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를 맞아 “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이라는 위원장 성명 발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 지역, 세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고, 팬데믹의 위기에 차별, 낙인, 혐오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바이러스”(5월 20일)

혐오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국민일보, 10년차 이하 57명 기자와 차장기자단이 차례로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

전망

-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인, 신천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었음.
- 다행히 시민사회와 방역 당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최악의 상황을 막았으나, 여전히 혐오 확산의 가능성은 존재함. 실제로 소수자, 취약계층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혐오가 확산되고 있음.
- 중국인 혐오는 중국 내 확진자와 중국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으나, 6월 초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쉼터 거주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조선족 자체가 바이러스이자 공공의 적”이라는 식의 혐오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
- 이주자, 노숙인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 또는 취약계층·집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낙인과 혐오의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것이 중국인 혐오, 이주자 혐오로 이어질 수 있음.

전망

- 혐오와 차별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방역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혐오와 차별은 소수자/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 혐오와 낙인은 국가 전체, 지구촌 전체를 위협한다

예) 소수자, 취약계층 집단 감염

예) 이주자 마스크 지원, 재난 지원금 지원

예) 코로나 방역 해외 원조

동포사회는 혐오·차별을 거절할
자유의식을 갖춰야

김정룡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장

들어가는 글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루 뒤인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전원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은,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 내 법 제정을 목표로 내걸었다. 인권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쟁점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다. 인류가 이미 70년 전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했듯이,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다. 인권위는 이번에도 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최초로 발의된 것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때였으나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과연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적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여기서 우리 이주민의 눈길을 끄는 것은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언어 등등이며 우리 이주민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인권위는 국회에 보낸 평등법 시안에 혐오표현을 추가했다. 사회에서 흔히 생겨나는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을 추가한 데 대해 "차별 대상이 되는 존엄성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왜곡하며, 그 결과 혐오 표현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고착하고 불평등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이주민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던 조영선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중국인에 대한 보수 정치인의 발언이 충분히 불법적인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늦어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될 것인지. 가령 이 법이 통과되었다 해도 혐오·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혐오·차별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난 것일 뿐이고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물심양면에서 지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혐오·차별을 당하더라도 지혜롭게 대응할 줄 알아야 덜 괴롭다. 그 지혜로운 대응이 무엇일까? 혐오표현을 거절할 줄 아는 자유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1. 한국인이 중국인을 혐오하는 역사적인 근원

1.1. 피해와 혐오는 동전의 양면

어느 한 착실한 역사학자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천 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아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천 번 중에 다수가 일본이고 소수가 중국이란다. 굵직한 사건만 해도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1910년부터 36년 신민지배 했다. 중국은 한나라 무제 때 한반도에 한사군(낙랑군·임둔군·진번군·현도군)을 설치하여 지배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켜 한반도를 쇄발로 만들어놓았다. 조선시기 도독부를 설치하여 지배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일본인을 증오했고 혐오하는 심리가 강해졌으며 중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일 수가 없이 혐오의 심리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피해와 혐오는 동전의 양면이다.’

외침은 국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고 침략 받은 국가 사람들에게 일종 공포심이 생겨난다. 청나라 소금장수한테 조선여인이 손목 잡혔다.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이다. 그런데 당시는 미투로 신고할 수도 없어 굉장히 억울한 여인에게 반드시 지켜줄 의무가 있는 남편이 소금장수한테 깍소리 한 마디 없이 대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팬 사건이 있었다. 당시 유사한 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 과정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2. 한국인이 중국인을 부르는 비속어가 유독 많아

국경을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다보니 우호적인 협력관계일 때도 있지만 흉을 보는 앙숙관계일 때가 더 많았다. 가난한 프랑스 서민들이 개구리까지 잡아먹은 것을 두고 영국인들이 프랑스인을 ‘개구리’라고 놀려대고, 프랑스인들은 소고기 굽는 방법 하나밖에 모르는 단조로운 음식 문화를 가진 영국인을 ‘구운 쇠고기’로 비아냥거린다. 이것은 서로 상대 문화에 대한 조롱의 표현일 뿐 혐오스러운 냄새는 없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삼국을 보면 서로에 대한 경멸스런 표현이 심각하다. 중국은 일본인을 귀신 새끼라는 뜻으로 ‘르벤귀이즈(日本鬼子)’라 부르고, 일본인은 중국인을 구제할 수 없는 병신이라는 의미로 ‘동아병부(東亞病夫)’라 불렀다. 일본과 한반도도 서로 앙숙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를 경멸하는 비속어가 있다. 일본인은 가난하고 못사는 조선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말로 ‘조생진’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그나마 점잖은 표현인데 비해 조선인은 일본인을 ‘쭉발’이라 부른다.

중국과 한반도도 서로에 대한 비속어가 험했다. 중국인은 조선인을 ‘까오리팡즈(棒子, 고려몽둥이)’라 불렀다. 옛 중국 민간에서는 몽둥이(팡즈, 棒子)는 경멸스런 ‘-놈’이라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가난뱅이

는 ‘총방즈(窮棒子)’, 만주후기에 관동에 진출한 산동사람을 ‘싼똥방즈’라 불렀던 것이다. 중국인이 우리 민족을 ‘까오리방즈’라고 부르게 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근대에 이르러 일제의 중국침략 과정에서 중국에 간 조선인들이 일본인보다 더 앞장서서 나쁜 이미지로 남았고 그때 붙여진 ‘고려놈’을 뜻하는 ‘까오리방즈’가 등장했다는 것이다.(대만 관련 선전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의견)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 조선인에 대한 비속어보다 조선인이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비속어가 혐오와 경멸의 뉘앙스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인은 중국인을 ‘짱꼴라’, ‘짱깨’, ‘때놈’ ‘왕서방’ 등으로 불렀다. 일본이 중국 주체민족인 한족을 비하해 불렀던 ‘장코로’에서 유래한 ‘짱꼴라’는 ‘청국노(淸國奴)’, 즉 청나라 노예라는 뜻이다. ‘짱깨’는 19세기 말부터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중국 현지의 가성비 좋은 비단, 삼베, 모시를 조선에 들여와 주단포목점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는데 가게의 경영과 관리를 담당했던 중국인 사장을 장꾸이(掌櫃, 금고 관리)라 부르면서 유래되었던 것이다. 당시 포목점뿐만 아니라 이발소, 양복점, 소금가게 등의 기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장사수완을 발휘한 이들 장꾸이는 조선에서 부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정치, 경제 주권을 일본에게 모두 빼앗긴 조선인들한테 부자 중국인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게다가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선인과의 교류가 부족했던 중국인에 호의를 가지기 더 어려웠을 것이다. ‘장꾸이’에서 유래된 ‘짱깨’는 돈만 밝히는 중국인이라는 혐오 정서를 깔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정영숙, 중국인이 싫어하는 말, P161)

왜 세상천지에 차이나타운이 흔해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만 차이나타운이 없는가? 집정자들이 과거 돈 잘 버는 ‘짱깨’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이 ‘짱깨’에 대한 혐오정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1.3. 혐오표현인 왕서방을 현재까지도 사용

왕서방은 현재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부르는 대명사로 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중국인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표현이다.

‘비단장수 왕서방’이란 노랫말이 있는데 여기서 왕서방은 주단포목점을 비롯해 조선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장꾸이’, 즉 ‘짱깨’의 점잖은 버전이다. 남의 나라에서 돈 좀 번, 우리 먹을 것도 없던 가난한 조선에서 야금야금 자기 잇속 챙긴 비릿한 돈 냄새가 이들에게 물씬 풍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에는 ‘애먼 놈한테 우리 것 다 빼기겠다.’는 경계심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식민시대의 피해의식은 한 세기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중국인을 묘사할 때 마치 대명사처럼 소환하고 있다.(정영숙, 중국인이 싫어하는 말, P164)

‘자금력을 앞세운 왕서방의 기습’
‘북한 농업 경험...왕서방에게 뺏길 건가’
‘왕서방 모시기 적극적인 일본’
‘얼리 어답터 왕서방 잡아라’

‘소고기 맛 들린 왕서방 탓에 국제 육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고급화된 왕서방 입맛에 고삐 풀린 소고기 값’

한국 언론에 등장한 기사 제목들이다. 이런 제목들은 중국인을 혐오하는데 부채질하는 선정적인 수단들이다.

한편 왕서방은 사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심했던 2016년에는 361건, 2017년에는 228건이 사용되었다(네이버뉴스 검색 결과. 578개 언론사). 그러다가 사드 갈등이 한바탕 지나가고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풀리기 시작한 2018년에는 왕서방 사용이 170여 건으로 줄었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왕서방을 자주 사용하고 관계가 나아지면 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왕서방에 확실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영숙, 중국인이 싫어하는 말).

2. 한국인의 허무한 우월주의

2.1. 야랑자대(夜郎自大)한 한국인

기원전 200년경 한나라 때 대륙 서남쪽에 야랑국(夜郎國)이라는 아주 작은 별 볼썽이 없는 나라가 있었다. 한나라에 비할 수도 없는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야랑국 왕은 한 번도 나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인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쳇말로 착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랑국을 방문한 한나라 사신에게 왕이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한나라와 우리나라, 어디가 더 큰가?”라고 묻는 바람에 한나라 사신이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았다고 한다. 그 후 중국인은 이 이야기로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다. 야랑자대, 자신이 크다고 여긴다는 의미로, 자신이 최고인줄 세상물정을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에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있다. “한국에 전기밥솥 있느냐”고 일본인이 물었다고 저자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일본인은 진짜 세상물정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했다. 20세기 도 아니고 21세기 문턱에 들어선지 10년이 지난 어느 하루 필자의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무더운 삼복 날씨에 더위를 말려보려고 수박을 쪼개 먹고 있었다. 한국인과 조선족이 반반이었다. 그 당시까지 중국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는 한 한국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에 수박 있어요?”라고 물어 하마터면 필자도 뒷목을 잡을 뻔 했다.

“중국에 이것 있어요?”

물론 질문자는 악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듣는 자의 입장에서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한국인의 이 질문 때문에 중국인은 한국인을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취급하고 있다.

2.2. 중국인을 경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언론들

모 방송국 예능프로에서 벌어진 일이다. 배우 김고은이 중국에서 10년간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녀가 중국의 학교 얘기를 하던 참이었는데 진행자 A가 “중국에서는 자연에서 배우지 않느냐, 만주별판 같은 곳에서”라고 말한다. 그러자 진행자 B는 한 술 더 뜬다. “중국 학교에서 붓을 사용하지 않느냐.” 깜짝 놀란 김고은과 메인 MC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이 둘을 반박(면박)한다.

여기서 자연은 중국인은 가난해서 교실도 없이 밖에서 글을 배운다는 뜻이다. 자연과 붓, 실로 어처구니없는 언급이다. 이 내용을 다룬 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시대착오적인 중국인식 때문에 한국인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김고은에게 호감이 생긴다는 말을 덧붙였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한국인 시청자들은 그저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중국에서는 이 일이 일파만파 번져 혐한 정서를 일으키게 만드는데 크게 부채질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3. 재한 중국인에 대한 혐오·차별은 역사의 연속선상으로 봐야

3.1. 재한 화교·화인에 대한 혐오·차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한족)은 노화교와 신화교로 분류하고 있다. 노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기준으로 1949년 전에 한국에 온 중국인을 지칭하고 신화교는 중국 개혁개방을 통해 국문을 연 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온 중국인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노화교들은 2만여 명이 되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 다만 군사정부 시절 화교에 대한 탄압에 의해 차이나타운도 없이 각자 제한된 업종 내에서 주로 짜장면을 비롯해 작은 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해왔다.

신화교는 유학 왔다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자,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중국여성, 수소 투자자 및 단기비자로 입국했다가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고 불법신분으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 등이다.

중국인 유학생 중에 부모의 두터운 자금력 덕분에 한국에서 대학교 기숙사가 아닌 혹은 홀로 살 수 있는 작은 월세방이 아니라 역대급 전세를 맡아 지내거나 중국 측 인맥을 통해 화장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장사를 통해 돈을 번 사례가 꽤 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이사 업체를 꾸려 수익 원을 벌었다. 물론 사업자도 안 내고 불법운영이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당시 기사 중에 내국인들만의 영역인 이사 업체에 왕서방이 뛰어들어 이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기사를 접한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당연히 혐오스런 비단장수 ‘왕서방’이 떠올랐을 것이다.

제주도 관광음식점, 호텔, 버스업체, 쇼핑센터까지 중국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기사가 수 없이 등장했다. ‘손 큰 유커 명동 쇼핑가게 화장품 싹쓸이’ ‘중국 유커 동대문 점령’ ‘중국 유커 6천명 치맥행사’ 등등의 기사는 내국인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한 느낌이 중국인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고 ‘공포와 혐오는 한 끝 차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목점의 왕서방을 떠올리게 된다.

4.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차별 현상

4.1. 조선족은 동포가 아닌 중국인이라는 인식

‘한국과 중국이 축구하면 어딜 응원 하나?’

이 질문은 한국인이 조선족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을 대변한다. 즉 조선족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 것이다. 만약 중국을 응원한다고 대답하면 굉장히 섭섭해 한다. 섭섭한 차원을 넘어서 ‘당신들은 동포가 아닌 짱깨네’라는 반응을 보인다. 왜 한국인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 단일국가, 단일조국이라는 단일 패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낯은 정이 키운 정보다 더 크다는 하나의 진리만 알고 있을 뿐 키운 정이 낯은 정보다 더 크다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한핏줄을 나눈 동족이라면 당연히 고국 한국을 응원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한조선족사회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선족을 향해 ‘짱깨들은 중국에 물러가라’는 댓글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청년경찰’ 김주환 감독은 “냉전시대 미국영화 소재에 소련이 많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새로운 소재로 조선족을 등장시킨다.”고 말했다. 이 말을 분석해보면 조선족은 한국인과 동족이란 인식이 감독의 머리에 없고 조선족을 새롭게 한국사회에 등장한 외국인 혹은 중국인으로만 여긴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만약 조선족을 진정 한국인의 동포라고 인식한다면 범죄의 소굴로 각색하지 않을 것이다.

4.2. 혐오·차별에 앞장서 있는 한국 언론들

‘청년경찰’ ‘범죄도시’를 비롯해 조선족을 범죄의 소굴로 각색한 영화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왔고 드라마도 가세해서 조선족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화와 드라마는 허구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아무리 허구일지라도 반복이 계속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거짓말도 너무 반복되면 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로 본다 치고 팩트를 생명으로 다루는 언론은 한 집단을 범죄소굴 혹은

은 범죄가 만연하는 사회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얼굴인 국영방송 KBS가 <황해>라는 개그프로그를 1년 넘게 방송했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한국 00교수가 조선족 모임에서 식사 시 “당신네 조선족 가운데 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가?”라는 질문을 해서 주위를 당황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대학교 교수가 이 정도라면 일반 국민은 어떨까? 이 개그프로그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차별을 생산하고 부채질하는데 ‘일등공신’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올해 연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일부 한국 언론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림동에 달려와 기사를 생산해냈다.

‘마스크 안 끼고 거리 확보하고.....’

당시 필자가 살고 있는 가리봉 인근 가산동 오피스텔 단지에 10만에 이르는 한국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 중 마스크 낀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을 때인데도 유독 대림동만 마스크 낀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기사는 대림동을 사실이 아닌 매도의 목적으로 기사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4.3. 혐오에 앞장서는 보수정치인들

어느 나라든지 막론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보수진영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 기존의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는 성향을 가진 것이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정치인들이 외국인 배척에 앞장서는 것이다.

“외국인은 우리사회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외국인에게 똑 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대통령 대행까지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외국인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낼 것을 다 내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상식조차 모른다는 것은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아~ 큰 공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10여 년 전 이회창 대통령 후보께서 ‘불법체류자를 1%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당시 조선족 불법체류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을 때였다. 보수가 외국인 배척에 뿌리 깊다는 증거이다.

올해 2월 말경 뜬금없는 ‘조선족게이트’ ‘차이나게이트’가 등장했는데 보수정치인들 중 마치 큰 기회나 잡은 것처럼 당론까지 몰고 갔다가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4.13총선 후 낙선된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투표를 신고하는 동포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거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사건은 동포가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는 또 뜬금없는 중국공산당 해커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한 때 대한민국 간판 아나운서까지 지낸 사람이 동포에 대한 생각이 이정도로 빈약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동포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의식을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5.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방법과 지혜를 갖춰야

5.1 재한중국인사회가 반성해야할 문제

코로나19 초기 대림동 관련 기사들에서 비위생적인 모습을 지적하였는데 옳은 지적이다. 먼지가 펄 펄 날리는데 면음식을 진열해놓고, 해바라기 껍데기가 지저분하게 바닥에 깔려 있고 소수이긴 하지만 거리에서 해바라기 까서 껍데기를 아무데나 뱉어버리거나 가래침을 튀, 튀하고 아무데나 뱉거나 속옷을 올려 속살이 보이는 배때기를 들어내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시골벽적으로 한바탕 떠드는 등, 최근에는 현장 일꾼들이 일이 끝나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 한국인들의 코와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있다. 대림에서 가리봉을 지나 독산이나 가산동에 가는 버스들 안에서는 모욕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난다. 버스기사들의 증언이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다.

한국인으로부터 혐오·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마땅히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혐오·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5.2. 혐오·차별 대응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6월 7일 가리봉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또 한국 언론들이 앞 다퉈 대림동에 달려와서 취재에 열을 올렸다. 왜 가리봉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림동에 쫓아와서 그 난리들 피우는지?

“가리봉동에서 확진자가 나와 대림동이 떨고 있다.”

정말 웃기는 기사제목이다. 청담동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삼성동이 떨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가리봉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림동에 쫓아와서 난리 피우는 것은 중국인 최대 밀집지역인 대림동을 건드리면 전체 재한중국인사회를 건드린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의 발로일 것이다.

필자는 가리봉에서 살고 있고 사무실도 가리봉에 있으나 수많은 한국 언론 인터뷰를 전부 거절해버렸다. 기자들의 사전 연락에서 일치하게 가리봉에서 학진자가 나와 한국인의 혐오·차별에 대해 동포사회 반응을 알고 싶다는 취지이다.

“한국사회가 동포사회를 혐오·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언론들이 혐오·차별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이 장난이 아닌데요.” “댓글은 일부 밥 먹고 심심한 내국인들이 쓰는데 대해 왜 굳이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분들의 댓글이 한국주류사회를 대변하는 것도 더욱 아니지 않느냐. 때문에 보잘 것 없는 댓글을 갖고 언론이 나서 떠들 필요가 없으니 나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유학생이 당지 사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는 없었다. 독일에서 세 들어 있던 중국인을 주인이 코로나 전파자라고 내쫓는 사례는 한국에서는 없었다. 뭘 갖고 혐오·차별이라고 떠들 것인가?

이정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라는 책을 펴냈다. 우리는 마땅히 실제 존재하고 있는 혐오·차별에 대응할 줄 아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고 마땅히 혐오·차별을 생산해내고 있는 언론을 거절할 자유의식도 갖춰야 한다.

04

2020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주제토론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와 보편적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 (2020.8.)

조영관(변호사)

1.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와 혐오/차별 사례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그 증상이 폐렴과 유사해 초기에 ‘우한폐렴’으로 불렸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다가,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공식명칭을 COVID-19로 발표하면서 정부도 공식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병명(病名)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 또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지역과 국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는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몇몇 정치인들은 질병발생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고, 이러한 부정적 · 혐오적 정서를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우한폐렴’, ‘중국폐렴’이란 표현을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용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공적 영역에서 이러한 혐오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중국과 중국에서 온 이주/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코로나19와 아무 관계없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한 추방’이나 ‘외국인에 대한 국경봉쇄’와 같은 주장으로 이어졌다.

언론도 거들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급성 감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재난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의 보도는 자제(제13조)’하고, 선정적 보도(제15조)나 감정적 표현을 자제(제16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 일부 언론 보도는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대림동 지역의 모습을 보도하면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위생 불량 심각’으로 표현하거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낮았다’와 같은 추정적 표현으로 국내 머물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외국인 지원기관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국내에 머물면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A는 평소 자주 가던 학교 카페에서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하철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대화하던 재한 중국동포(조선족)는 다른 승객으로부터 ‘너 같은 중국사람 때문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며 공개적으로 삿대질을 당해 지하철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10여년 넘게 살아온 혼인이주 여성은 중학생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중국 사람을 한국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수업이 끝난 이후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와서 ‘너는 중국사람이니깐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일정기간 인원을 줄이면서 외국인 직원들에게만 무급 휴직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이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할 제도의 영역(사회안전망)으로까지 옮겨갔다는 점이다. 일부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제도는 그만큼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 게다가, 제도에서 배제되는 집단은 대부분 경제적·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회적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주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소식과 확진자 동선 등 개인방역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이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행정안전부가 외국인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긴급재난문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알리는 ‘손 씻기 요령’,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공적 마스크 구입안내’ 등 개인 위생과 질병관리에 필요한 공적인 정보 역시 체류 외국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거환경이나 노동환경이 전염병에 취약한 조건인 경우가 많은 외국인 집단에게 정보제공의 결핍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정부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도 외국인들에게는 차별적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이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내국인과 달리 건강보험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하도록 했다.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유예하였는데, 그 결과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 박해를 피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난민 신청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농/어업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못한 이주노동자,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 건보 체납자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어 공적 마스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문제가 많다.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체납과 체류자격과의 연계, 납부한 보험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에 대한 의료 인프라 개선 등 바꾸어야 할 내용이 많다. 보편적이어야 할 사회보험제도가 인종/국적으로 차별적으로 설계되거나 운영되어선 안 된다. 제도가 차별을 용인할 때, 현실의 차별은 더욱 공고화된다.

재난지원에서도 외국인은 배제되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국내체류 등록 외국인이 제외 된 것이다. (서울시(검토중), 안산, 부천, 부산 진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외국인 중 일부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다).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직/간접세를 납부하고 있고, 생활관계가 주거지에 있으므로 지급대

상에서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러한 인구수에 등록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다. 즉, 외국인 주민이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서 지자체 예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축구를 위하여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체류지에서 소비해야하는 성격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는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법적으로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고, 차별적이다. 해외 어느 나라도 국적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된 외국인에게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다.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 10. 코로나19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긴급 소득지원 사업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20진정0234400)하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후속조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2.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개선과제 - 보편적 차별금지법 마련

불행하게도, 앞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국경통제가 강화되고, 국경을 오가는 이주는 상당기간 제한될 것이다. 이동이 제한된 개인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부적 희생양 찾기는 커질 것이다. 경제적 취약 계층일수록 방역 위험요인이자 장기적 불황에는 치명적이다. 경기침체와 사회적 자원의 부족은 결국 보편적 보호에서 선별적 보호로 전환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선택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대표되지 못하는 이주민과 같은 비국민은 또다시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주민 내부에서도 체류자격이나 국적에 따라 집단 간 갈등, 대립도 생겨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통제는 그동안 감춰진 우리사회가 의존하고 있던 이주노동의 수요를 드러내는 계기도 되고 있다. 이미 가장 취약한 일자리부터 노동력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농촌 일손부족, 중소기업과 단순취업분야 장기적 인력난 등). 고용허가제도 신규인력 유입에 상당기간 제한될 것이고, 이는 현재의 단기순환형 이주노동 수급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동체 내부의 연대, 위기의 공동극복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 형성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위기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통합과 연대로 극복해 낼 수 있다면 이러한 경험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이민자와 이민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부당한 차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며, 차별이 위축시키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제도적 보호이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새로운 상식으로 올해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편적 차별금지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법제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또는 차별시정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 〈청년경찰〉 관련 소송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인종,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률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차별의 구제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실효적이지 않다.

사회 전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동포 차별 현상에 대한 소회

(2020.8.)

김동훈(서울서남권글로벌센터장)

존경하는 홍성수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를 통해 우리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치포럼 김정룡 대표님의 생생한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동포들이 중국과 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상이 증폭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글픔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동포들과 인식을 함께하는 내국인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K-방역'으로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역 활동은 분명 전 세계적으로 칭찬 받을 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역 과정에서 있었던,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많은 차별적인 정책으로 더 낮은 곳에 있는 이들, 잘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이를 인내해 온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고통의 결과가 바로 성공적인 'K-방역'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번 'K-방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안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저의 소회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책이 가져오는 차별의 심각성입니다.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차별은 기존의 혐오와 차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차별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사실입니다. 공적 마스크 공급과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의 건강권을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제시함으로 차별주의자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 국적자를 이 재난 상황의 유발자, 위협집단으로 지목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주민 집단거주지를 위험지역이라는 묘사하고, 지역 전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고착화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림동이나 가리봉지역 등 동포사회에서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위 청정지역으로 오랜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기이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스운 결과는 과연 한국이 자랑하는 'K-방역'의 결과일까요? 누구도 '그렇다'라고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는 중국동포들의 처절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모순되게도 이 현상은 중국동포 혐오현상이 만들어낸 기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과 동포에 대한 혐오가 서서히 불붙고 있을 때, 동포사회는 이 지역에 동포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동포에 대한 혐오가 겹잡을 수 없이 번져 동포사회가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확진자로 인한 지역확산의 안전문제가 아니라 혐오 확산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많은 동포단체가 앞다투어 방역 활동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결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방역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에서는 배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나누는 것은 싫다는 정부의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차별주의자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걸 보라. 이들은 차별받아도 당연하다.’

얼마 전 모 정당의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 표현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빌어 표현하자면 이렇게 차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나라가 당연히 천박한 나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국가인권위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미등록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민을 대상화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동포도, 이주민도, 미등록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사람이 우선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혐오와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포사회에 드러난 인식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포에 대한 혐오는 늘 많은 가짜 뉴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마스크 대란과 더불어 시작된 동포혐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스크 대란 당시 조선족이 현금다발을 들고 한국의 마스크 공장을 돌며 마스크를 싹쓸이해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중심으로 동포에 대한 혐오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몇몇 동포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마스크 유통을 통제하고 난 뒤 역으로 중국에서 마스크를 들여와 유통하는 동포들도 많았습니다. 이후 체온계와 다른 방역물품으로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방역물품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동포들의 사재기나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소수의 사건을 재료로 활용하여 동포에 대한 혐오가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방역물품 사재기나 사기 사건이 한국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혐오로 치닫는 이 현상은 이전의 혐오현상과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관계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포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몇 건의 사실을 전제로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포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아서 혐오 현상을 막으려는 생각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러한 동포들의 자정 노력은 매우 유익하기는 하지만 혐오를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더라는 점입니다. 또 ‘범죄행위가 없으면 혐오가 없다’라는 전제는 혐오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 행위가 없다고 혐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혐오의 특성이고, 이 전제는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단골 소재로 이용됩니다. 차별주의자들은 어떠한 일도 혐오를 위한 소재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혐오 그 자체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까지 동포들의 자구 노력이 혐오를 막지 못했거나 의미가 없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동포들의 노력이 혐오는 막지 못했지만 지역 확산은 막아내는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동포들 스스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며 주민으로서 그 역할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언젠가는 차별주의자들을 몰아낼 것이고 든든한 우리의 이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동포들의 생각의 전환을 저는 요구합니다. 또 동포들에게 지금까지 당신들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더 나아가 동포사회가 다른 이주민 구성원들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더 나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 어디가 더 나은 정책인가라는 분쟁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부가하며 저의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별’에서 ‘차이’로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2020.8.)

전춘화(홍익대학교 교수)

혐오와 차별의시선, 당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이다. 동포사회는 혐오·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지능력과 자아반성 그리고 지혜롭게 대응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이승현 《혐오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매우 싫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사회 내의 소수자 집단을 말로 공격하고, 그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생각을 퍼뜨리는 표현이 바로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가해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게 당연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차별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믿게 만든다.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흩어진 사람’이란 뜻의 그리스어) 중 유독 천대받는 중국 동포. 홍재희 영화감독은 책 『그건 혐오예요』에서 “일제 치하에서 농토를 빼앗기고 일자리를 잃어 살길이 막막해진 조선인들은 유랑민으로 떠돌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이주했다. 그들의 후손이 현재 조선족이다.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든, 더 나은 기회를 잡고 싶어서든, 그렇게 많은 한국인이 여기가 아닌 저기 어딘가에서 살기 위해서 이주를 감행했다. 그리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이어 “미국·서유럽 교포는 환대해도 중국·러시아 교포는 차별한다. 사람을 ‘특정 집단’으로 묶어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유독 중국 동포를 향한 비난은 왜 그리 쉽게 용납되는 것일까?

김정릉소장 발제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역사적인 근원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우리는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흔히 사용된다. 심지어 잡지 등 대중미디어 매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럼 한국인이 같은 민족인 동포를 “조선족”이라고 불러도 마땅한가 부터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 56개 민족중 하나를 가르킨다. 중국에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맞는 표현이지만 한민족인 우리로서 한국인이 동포인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중국동포들을 한민족으로 인식 하지 않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조선족”은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동포”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발제문에 나오듯이 혐오에 앞장서는 보수정치인들과 한국 언론들이 한국인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차별감정을 더 악화시킨다. 사실 우리가 혐오할 대상은 특정 집단을 혐오하게 만드는 행위와 그런 혐오 감정이 아닐까?

그럼 왜 수많은 외국인들 함께 살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유독 한민족인중국동포가 혐오와 차별의 표적이 되어있는지 한국사회에서 문제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동포사회에서도 문제점을 찾고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한중수교 28주년 거의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많은 중국동포분들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심지어 귀화까지 하였다. 인생의 반을 한국에서 지낸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우리 동포들이 이 사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왔는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노력을 해서 한국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한국사회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실망과 분노를 쌓아오지 않았는지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 우리 또한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포들은 지금도 한국이란 사회에서 하나의 높은 장벽을 치고 이 사회와 동 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민족으로 언어가 잘 통하고 습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치관과 교양수준 모든 부분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국사회만의 노력은 부족하다.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포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가져고 앞으로 인정받으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중국동포에 대한 무차별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동포사회의 대응법이 더 많은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성수교수 《말이 칼이 될 때》에서 이 책에서 혐오표현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강화와 혐오표현에 맞선 '대항표현'이다.

대항표현이란 말그대로 혐오표현에 맞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항표현의 가장 큰 의의는 혐오의 지형을 뒤바꾼다. 혐오표현의 선동은 소수자 집단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대항표현은 소수자와 제3자를 연대시켜 반대로 혐오 선동자 집단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당사자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 이외의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적 항의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니라 발화자를 고립시키는 것이 대항표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국동포들 스스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중국동포에 관심 있는자들과 함께 혐오차별하는 원천을 막으려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들을 범죄 집단으로 그린데 대해 법원은 2020년 올해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동포들에게 사과하라” 판결이 있기 까지 동포사회와 동포사회를 사랑하는 분들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이 바로 대항표현 좋은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한다. 오늘 이 포럼 자리 또한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중국동포사회가 대항표현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차별’에서 ‘차이’로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함께 더불어 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꾸준히 합시다.

“동포사회는 혐오·차별을 거절할 자유의식을 갖춰야”에 대한 토론문 (2020.8.)

박동찬(연세대학교, 이주민 활동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환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민낯과 환부가 노정되고, 그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소수자, 이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론회나 세미나가 열리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무엇보다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 외 9명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서 발의되었고, 다음날인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의 입법을 촉구하였다. 차별·혐오 피해당사자들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차별과 혐오가 안전과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1. 코로나19 속 정책적 차별

중국인, 중국동포들이 겪는 일상적 차별은 발제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차별의 또한 축인 정책적 차별에 대하여 부연하고자 한다. 정책적 차별은 정부 부처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취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이주민 배제를 들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개로 지급하였는데 외국인 지급 조건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중앙정부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하였는가 하면, 경기도는 외국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고, 경기도 안산시에는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하였다. 기준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납세하고 생활기반을 이곳에 둔 절대다수의 외국인은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 6월 11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끝내 시정되지 않았다.

이어서 2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행된 마스크 5부제를 들 수 있다. 지금은 시중에 흔하지만 5부제 초기까지만 하여도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토론자는 이 마스크 5부제 정책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다. 수혜 대상자가 한국국민(국적자)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 또한 정부의 시책과 관련 있는데 2021년 2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유예되어, 한마디로 가입하고 싶어도 그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처지다. 이로 인해 5부제 시행 초반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유학생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안다. 다행히도 4월 20일 후로 정책이 개선되어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2.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중국동포는 어디에?

동포사회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동포사회의 대응방식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낀다. 토론자의 관찰에 따르면 오랫동안 차별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는 보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배제를 감수한 채 그것을 피해 주변부에서 생활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런 차별행위에 정면으로 맞받아쳐 차별 주동자, 즉 가해자를 규탄하고 처벌하는 것이 두 번째 선택지다. 최근 들어 또 한 가지 대응양식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피해의 구체적 정황을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피해자가 자신만의 구역에 머물면서 소수의 사람과 교분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차별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러한 회피는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다음으로 가해자를 거꾸로 받아치는 행위인데 형사처벌, 민사소송,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심의 위 제소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응도 결국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가해자 사이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정황에 대한 호소로 일부 양식 있는 사람의 동정과 위로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있어서 잠시나마 정신적 위안을 받을지는 몰라도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

조직화 된 혐오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혐오운동도 손잡고 대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혐오 가해자와 구별되는 방관자,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순간적으로 혐오를 표출하였던 경미한 가담자도 모두 연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이에 동포사회는 문제해결의 적극적 주체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를 이루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닌, 연대의 손길을 뻗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였지만, 사실 이는 절대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법안이다.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출신 지역, 고용형태, 학력,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 이주민, 중국동포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사유도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이처럼 차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차별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에 중국동포 사회의 집단적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안타깝다.

3. 우리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가?

중국동포 사회는 ‘동포’로서의 ‘선민의식’을 해체하여야 한다. 토론자가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동포나 다문화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또 전에 토론자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방송과 접촉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주행위자로서의 중국동포도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겠지 싶었으나 예상이 빗나

갔다. 중국동포는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다 못해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여타 이주 집단과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체성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게다가 다중적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토론자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아르바이트 때는 노동자, 출입국에 들릴 때면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기도 하고 강하게 요구받기도 한다. 한 가지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의도하든 의도치않든 차별과 배제를 양산할 수 있다. 수적으로,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열등한’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또 다른 위계의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다문화 분야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중국동포 출신 후보자와 베트남 출신 후보자가 경선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무렵 토론자는 SNS상에서 중국동포 후보자를 지지하는 포스팅 하나를 보았는데 ‘80만 재한 중국동포와 20만 재한 베트남 사람들의 대결’이란 표현이 다소 언짢았다. 중국동포 사회가 그동안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결국 소수자와 약자였기 때문이다. 수적 우위라는 차별주의자의 논리를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반성하여야 할 지점이다. 강도와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차별을 내재하고 있다.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논리를 약자를 찾아 들이댄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4. 동포사회를 위한 제언

이주민, 중국동포가 한국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존립하려면 법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그것은 차별과 혐오를 지적 내지 시정하고, 여타 사회구성원과의 거리를 좁힘으로 연대를 형성하는 등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토론자는 몇 해 전에 한국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결성된 <동포모니터링단 강강술래>의 활동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시작 초에는 모니터링의 뜻조차도 어려워하였지만, 교육과 실습을 거쳐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언론의 편파 보도를 분석한 보고서까지 작성한 데 이른 경험은 소중하다. 또한, 영화 <청년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이주민센터 친구의 도움으로 진행된 소송 역시 유의미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상술한 활동은 동포사회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아직 벅차다. 그만큼 경제적 역량은 향상되었을지 몰라도 정치적, 문화적 역량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이제 동포사회도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다양한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이 시급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법을 로마의 가장 찬란한 전통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인즉 현재 소속된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진보적인 부분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발제자가 마무리에서 강조한 당사자 집단의 자성과 변화도 단순히 겉으로의 변화가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도 함께 체득하자는 호소로 사료된다.

